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① ; 남산도서관, 개관 80주년 기념 강연회

올해로 개관 80주년을 맞는 남산도서관(관장 황낙현)이 지난 5월 14일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개관 80주년 기념강연회>를 남산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독일 도서관의 구조와 새로운 경향”을 주제로 클라우디아 룩스(Claudia Lux, 독일 베를린중앙주립도서관)씨가 강연하였다. 독일에는 14,000개의 공공도서관과 3,000개의 대학, 전문도서관이 있다. 독일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한 도서관 구조의 중요한 기본원칙을 설명했다. 기본원칙은, 1) 각 도서관에 제대로 교육된 책임자급 전문사서인력의 배치, 2) 문제해결능력이 가능한 전문가 필요, 3) 장기적인 도서관 발전에는 확실하고 지속적인 재원 필수, 4) 과태료 징수, 5) 기능적으로 설계된 건물과 공간 배치, 6) 도서관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의사 결정권한을 가져야 함, 7) 도서관 홍보를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전시회)를 활용, 8)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교육(목록, 기기) 필요하다.

독일은 전국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4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는 중·소형의 공공도서관으로 소규모 시립도서관과 분관·자동차문고가 속하며, 2단계는 1단계의 기본적인 정보요구보다 수준이 높은 정보요구를 수용하는 대도시의 시립도서관이 속하며, 3단계는 몇몇 대도시 시립도서관, 전문도서관, 주립도서관, 학술도서관이 속한다고 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매우 특수한 전문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소수의 전문특수도서관과 독일 국가공동 수서계획(SSG-Programm)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도서관·국립전문도서

관·국립도서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라고 설명하였다. 독일의 사서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이원화 시스템에서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첫 번째는 전문직원으로 미디어와 정보봉사와 관련된 분야의 3년 교육과정이며, 두 번째는 4년 과정의 정사서, 세 번째는 2년 과정의 고급주제전문사서 과정이다. 독일 도서관계의 새로운 경향은 전자상호대차, 디지털도서관, 도서관과 대학 전산소와의 협동, 24시간 도서관서비스이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국가차원의 재정난으로 인해 분관에 전문인력의 배치나 다양한 자료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서관을 특성화시켜 공공도서관의 분관을 청소년도서관으로 바꾸거나 또는 컴퓨터도서관, 외국어자료 제공을 전담하는 국제도서관, 음악도서관 등으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 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서관 협력을 통한 각종 자료의 제공으로 공공도서관과 학술도서관의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 도서관 정책에 변화를 유도한 요인들을 지적하였는데, 출판량의 증가, 컴퓨터, 팩스, 인터넷 등의 정보기술 발달,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생산을 들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멀티미디어 소화능력이 요구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서관 조직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면서, 특히 도서관의 책임자급 위치에 있는 직원들은 새로운 정보기술습득이나, 새로운 도서관 경영마인드 등의 계속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② ;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실에서는 ‘학교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5월 28일(화)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초·중등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01년 시범 구축 추진 현황 파악 및 개선 방향 협의하며, 2002년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운영 방향 모색과 디지털자료실 설치 학교 담당자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이 중 몇 개의 발제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방향 소개”에 대해서는 김두연 교육인적자원부 과장이 발표하였다. 김 과장은 학교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유통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자료실」구축 모델의 호환성을 유지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다. 디지털자료실의 경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보급 및 기능향상, 업그레이드, A/S 등을 지원하며, 운영인력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도서관 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인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별 자료공유, 공동활용 기반조성 및 단위학교 DB 구축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학교단위 자료의 종합목록 구축뿐 아니라, 단위학교별 자료를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입력,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별 소재정보 제공 및 상호대차 이용 기반조성을 하고 있다.

초·중등 학생의 정보자료에 대한 주제어 접근 능력 강화 및 교과 단원 주제와 연계된 교육용 시소러스 개발의 연차적 연구, 단위 학교의 부족한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고 학교간, 교사간, 학생간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추진계획 소개”에

대해서는 이희수 한국교육개발원 실장이 발표하였다. 이 실장은 도서관 정보화의 기틀 위에 도서관의 뿌리인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 학교도서관은 시대에 둔감한 나홀로 도서 창고로 전락했다며,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학교도서관 없는 학교의 점진적 해소, 종합적인 교수학습지원센터로써 학교 도서관 기본 콘텐츠 확충,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와 확대, 학교도서관 관련 행·재정적 지원체제 정비를 들었다.

셋째, “2002년도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소영 교육인적자원부 사무관이 발표하였다. 이 사무관은 2001년도 디지털자료실 시범 구축 현황을 설명하고 2002년도 시범학교 선정 방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토록 하되, 향후 거점학교(인근학교 선도 등)로써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서전담요원이 있어 사업 내실화 및 향후 관리가 용이한 학교나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학교,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향후 거점학교로의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학교, 자료관리용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운영중인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하였다. 사서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인력지원 계획을 수립 후 적정학교를 선정한다고 하였다.

넷째,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구축사례”에 대해서는 오재익 부산시교육청 교사가 발표하였다. 오 교사는 구축 사례를 통해 프로그램 기능 및 내부설계와 관련한 전문가 집단 구성의 필요성, 일반 프로그램 사용자 집단의 선정,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이용확대를 위한 방법 모색, 단계적인 평가 필요 등을 지적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③ ; 경상북도학교도서관 세미나

경상북도는 경상북도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교육, 학교도서관에서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5월 29일(수)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시청각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학교도서관의 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선평 경상북도교육청 장학사가 발표하였다. 김 장학사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 역할을 하며, 단위 학교별로 학교 규모에 맞는 전통적인 라이브러리 개념을 강화한 학교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였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은 1교 1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전산화, 사서교사 배치, 학교도서관 업무 지원팀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학교의 학교도서관을 일정 수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에 대해 이숙희 부산총렬여자중학교 교사가 발표하였다.

이 교사는 독서교육은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서 사고력, 창의력,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독서하는 능력을 길러 평생 교육의 수단으로 여기게 하는 교육이며, 바른 인성의 함양과 자아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도서를 확충하고 각종 자료를 정비하고 전산화하여 학습 과제별 해결 및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탐색이 가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코너를 조성하여 CD 백과사전 및 CD 학습자료 등 CD-ROM 학습자료를 비치하고 브라우징 코너를 통해 학생들이 각종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정보실도 운영하여 독서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도서반 비블리옴을 운영하여 독서도우미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독서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학교도서관 순회지원 보고”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서 문헌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김후성씨가 발표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한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학교도서관 현장지원”팀에서는 경산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전산화 신청학교 12개교를 2001년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에는 울릉도 관내 11개 등 전 학교에 대한 지원을 나갔으며, 작년(2001년)에는 경산관내 12개교, 포항지역 1개교, 울릉지역 11개교에 대한 학교도서관 현장순회지원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올해에도 지원신청접수 결과 포항 및 청도지역 각 1개교를 비롯해 경산관내 17개교 등 19개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장지원팀은 사서 2명, 전산 1명으로 3명이 주 1회(1개교당 2일) 지원된다. 지원내용은 학교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 운영방법 및 자료 전산입력 방법 지도, 자료의 분류방법 및 서가배열 작업 지도, 라벨, 바코드 등 장비작업 지도, 도서관 이용지도(대출증 발급, 대출 반납 등), 도서대장 관리, 기타 환경정리 등이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④ ; 한국정보관리학회 2002년도 정보관리 강좌

한국정보관리학회는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2002년 정보관리강좌를 5월 10일(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서정연 서강대학교 교수는 “자연어 처리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검색기법”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HCI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컴퓨터 시스템의 설계, 구현 및 평가를 연구하는 분야이며,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인간의 정보처리 과정을 인간공학, 사회심리적 요소, 환경적 요소 등의 다양한 입장에서 관찰, 연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와 관련된 상호작용 모델, 이용자 이해를 위한 이용자 모델링 방법, 이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분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실제 상용 시스템들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수영 이화여대 강사는 “HCI와 정보검색 : HCI 이론과 기법의 정보검색시스템디자인 응용”에 대해서 강의하였는데, 웹이 새로운 정보 환경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정보검색분야에서 시스템의 성능 외에 이용자가 직접 상호 작용하는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평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정보검색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두 분야가 보다 가깝게 교류하는 계기가 되

었다고 하였다. 이 강사는 HCI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및 웹사이트 평가를 위하여 활용되어온 다양한 기법을 소개하고, 각 기법의 응용방법을 알아보았다. 웹 검색엔진의 유저빌리티 테스트, 이용자 가정 및 업무환경에서의 필드연구, 대규모 문서검색시스템의 상호작용 연구 등을 통해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하였다.

야후의 김진수 박사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평가 방법”에 대해 시스템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환경, 사용자의 시스템 사용목적, 사용자의 정보처리과정 등을 사전에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같은 요인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시스템의 구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스템 개발 과정에 그 사용성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가가 개발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개발 기간에 평가를 포함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지연 연세대학교 강사는 “이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의 원칙과 인터페이스 설계자들이 범하는 오류”에 대해 발표하였는데, 기존의 정보검색 시스템은 단순한 키워드 기반의 문서 검색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서 정확도나 편리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시소러스를 이용한 주제별 확장검색이라던가, 띄어쓰기나 철자 오류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검색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검색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들의 모델의 유형을 구분해서 각 유형에 필요한 기능들을 비교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⑤ ; 2002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한국비블리아학회는 2002년 5월 24일(금) 덕성여자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경쟁정보와 지식관리”라는 기획주제로 춘계학술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 제1발표장은 “경쟁정보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제2발표장은 “경쟁정보와 전문정보 활용”을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제1발표회장에서는 이춘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한국 의학학술지 인용지표 개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이교수는 한국 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즉 인용문헌) 분석을 통하여, 한국 의학학술지의 인용도 및 학술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측정할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 한국의학학술지 인용정보) 2000 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의학학술지 발표논문의 인용문헌 분석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였다. KoMCI 2000 project는 한국 의학학술논문에 의한 한국 의학학술논문의 인용도 분석을 국내에서 최초로 광범위한 규모로 시도한 작업으로써, 국내에서 2000년도에 발행된 69종의 주요 의학학술지들이 한국 의학학술지 논문을 얼마나 인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지들이 어떤 학술지를 인용하는지, 어떤 학술지들이 얼마나 인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이다. 또한 한국의학학술지의 영향력지표 값을 SCI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함으로써, 한국 의학학술지와 SCI 학술지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학술지 69종으로부터 받은 인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산출된 한국 의학학술지의 영향력지표 값의 크기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한국의학학술지의 인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인용지표들의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인용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있게 해석 및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용지표들의 제반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각종 인용지표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SCI는 국제학술지 5,900여종으로부터 받은 인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국내 학술지의 인용분석은 규모가 SCI의 1/100(의학학술지로 제한하면 1/30) 밖에 안되는 한국 의학학술지 69종으로부터 받은 인용을 분석한다는 점, 같은 주제분야에 속하는 학술지가 몇 종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학술지를 인용할 것이 별로 없어서 자체 학술지 인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등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용학술지 정보를 입력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르게 표기된 학술지명을 통일하여 표기하는 치밀한 노력이 없이는 인용데이터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부각된 여러 측면이 한국 의학계의 실정에 좀 더 부합하는 학술지 인용지표 및 학술지 평가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경쟁정보수집”의 주제로 발표한 한양대학교 도서관 김휘출 사서는 정보와 지식이 생산요소로 인식되는 지식경영 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많은 지식을 인터넷에서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말하였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는 핵심사이트 검색이다. 인터넷 상에서 경쟁정보 수집은 경쟁정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사이트를 직접 방문

하여 그 사이트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맞춤형 보서서비스이다. 경쟁사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상에서 생성되는 즉시 경쟁정보수집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제한검색 기능 활용이다. 일반 검색엔진으로 검색되진 않은 정보원은 검색엔진에 제한 기능을 이용하거나 특수한 검색엔진을 사용해야 한다. 네 번째는 정보의 확인이다. 경쟁정보담당자들은 1차적인 정보와 2차적인 정보의 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다른 정보원의 정보와 비교하거나, 저자를 확인하고, 생성된 날짜를 확인하며 도메인의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경쟁정보의 통계를 중요시하는 마케팅조사와는 달리 특정한 정보 하나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하고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소한 정보가 유익한 경쟁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황동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미술콘텐츠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요소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황 교수는 미술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정보서비스 하려면 전통적인 미술콘텐츠 도큐멘테이션과 화상정보의 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법을 연계시켜 다양한 미술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다원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미술콘텐츠 화상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술콘텐츠는 작품, 작품의 대체물, 작품의 기록관리, 작품에 관한 기술, 작가에 관한 기술, 작품의 대체물에 관한 기술 등 다른 분야의 정보와 비교하여 보다 다원적인 데이터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술작품은 본질적으로 비언어적 실체이기 때문에 정보검색을 위한 어휘 선택에 어려움이 있다

고 지적하였다. 미술콘텐츠의 색인과 검색방법으로 색인어, 분류번호, 화상 자체에 의한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나 미술콘텐츠와 같은 다중매체 자료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색인도구로는 불충분하다며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그 후 상세 정보를 기술하는 선별 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작품에 대한 경험적이고 물리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목록기술을 먼저 수행하고, 작품분석수준의 상세 기술은 연구결과가 공개되는 대로 추가수용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미술콘텐츠는 내용이 다양하고 사용목적에 따라 데이터의 심도와 분화정도가 달라지며, 작품대체물로 사용하는 매체의 유형 등이 틀리기 때문에 데이터요소의 확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사용빈도에 의해 이들을 분석하여 데이터요소를 제시하거나 데이터 요소의 빈도 수에 따라 미술콘텐츠의 적정데이터요소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인자 동원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는 “문화예술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안인자 교수는 통계정보서비스를 담당하여야 하는 정보전문가의 입장에서 문화통계의 체계, 항목의 구성 및 생산체계를 살펴보았다. 통계는 불확실성 극복을 위하여 얻어지는 수량적 자료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그와 같은 목적에 의하여 얻어지는 통계는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해석, 즉 특성인식을 위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유네스코위원회에서 1986년에 발표한 통계의 특성을 보면, 1) 기초 정보이며, 압축정보이다. 2)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게 할 뿐 아니라 경향을 분석하고, 미래의 요구를 분석하며, 자원을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도구이다. 3) 대부분의 통계는

정부기관에서 업무활동의 결과로 수집되는 정부 정보로써 생산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자료이다. 4)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자료로써의 통계는 의미해석이 필요하다. 5) 특정치를 정하거나 한계를 정하기가 불가능하여 통계 수치로써 계수화가 불가능한 항목이 있다고 하였다. 통계의 기능은, 1) 정책개발기관이나 정책당국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2) 모든 분야의 학술연구자에게는 연구의 기본도구이며, 3) 국제적 문화수준의 비교 및 평가도구이며, 4) 기업에서는 사업의 투자를 위한 결정자료, 생산품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자료 등으로 필수적인 정보이며, 5) 구성과 체계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 체계에 바탕을 두어, 세계적인 틀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통계자료는 출처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수행결과 얻어지는 행정 통계, 직접조사의 결과로 얻어지는 조사통계, 일차적으로 얻어진 보고통계 또는 조사통계를 가공하여 얻어지는 가공통계가 있다. 이를 관리 주체 면에서 볼 때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산하단체 등으로 생산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통계 자료의 이용 체계는 유통, 보급의 측면과 자료검색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문화통계자료는 모두 비매 혹은 기증의 유통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기증 받는 도서관이나 해당부처에 문의하는 방법 외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정보소스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문화예술 정보색인을 생산하여야 한다. 정보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용자그룹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요구항목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를 위한 방안은 우선 지표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선행된 후 현재 우리 문화에 적합한 자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표의 체계 위에서 기존의 통계, 생산 가능한 통계, 불가능한 통계를 구분하고, 통계 기관간의 협의와 분배과정을 거쳐 생산해야한다고 하였다. 그 후 검색서비스의 결과와 이용자와의 반응은 지표연구를 위한 새로운 추가 자료로써 활용하여 지표개선을 시행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각 단계에서 당면한 문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단계는 유통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정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경쟁국의 문화정책과 관심 분야에 관한 체계적인 지표체계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산기관간의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거쳐 적합한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쳤다.

변경된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연락처(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등)가 바뀌시면 사무국으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유태형 팀장)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⑥ ; 2002 기록학 심포지움 개최

한국기록학회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5월 22일(수) “2002년 정치변동과 국가기록물관리”라는 주제로 ‘2002 기록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기록유산을 통하여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새삼 되새기고 재차 다짐하는 자리였다.

기조발표는 이영학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이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회장은 국가기록물 관리는 그 사회의 문화적 척도이며 통치능력의 증거라면서 우리나라는 근현대 100여 년 동안 기록물 특히 국가기록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쉽게 폐기되거나 방치되어 옴으로써, 국가기록물이 국가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통령관련 기록물은 다음 정권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가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역사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하고 보존할만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 회장은 효율적인 국가기록물 관리를 위한 두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둘째, 전문인력의 육성과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주제는 이승휘 한국기록학회 이사가 “대통령기록물 보존과 그 과제”로 발표하였다. 이 이사는 기록물의 유출과 폐기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확산되고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법령에 의한 강제도 덧붙여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기관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있어 반드시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 경제성과 효율성이라며 대통령기

록물을 공공기록물의 일부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보다, 대통령마다 별도의 건물에 보존,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성과 효율성이 있겠는가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대통령기록물은 빠짐없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이관 받아야 할 정부기록보존소와 이관해야 할 청와대가 철저히 관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제2주제는 지수걸 대전·충남 기록문화발전을 위한 포럼 대표가 “지방자치와 지방기록관리”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지 대표는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발전시키려면, 자치단체는 당연히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특정 이해집단이 폐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견제와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정보제공의 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공공기록물이든 민간기록물이든, 지역적 가치가 높은 역사기록물을 수집·정리하는 일은 지방사회의 자치(정치)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라며 우리도 지방행정(특히 개발행정)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대립이 조성되었을 때 기록물, 즉, 역사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시비를 가리거나 사회적 합의(지역공론)를 이끌어 낼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 스스로가 그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자치)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다른 무엇보다 제대로 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⑦ ; 지식경제정보협의회 2002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

지식경제정보협의회에서는 “기업 기록관리,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002년 정기총회 및 세미나를 6월 5일(수) 전경련회관 3층 특1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록관리,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성수 교수가 발표하였다. 기록은 사용매체나 특성에 관계없이 영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문헌이다. 또한 기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관적 기록은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주관적으로 기술한 기록으로 개인일기, 업무일지, 자서전, 탐험기, 종군기, 전문록 등이 있으며, 객관적 기록에는 특정시대에 대한 광범위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기록으로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기록의 예로는 왕오천축국전이나 난중일기 등을 들었다. 집단기록은 정당·사회단체, 기업 등의 기록으로 기업기록은 정보공개법의 제정,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 품질관리에 대한 국제규격의 보급 등을 들었다. 공기록은 관보, 공고, 공시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기록관리 관련 각종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중국에서는 당안학, 일본과 한국에서는 기록관리학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각국의 국가기록관리기관의 명칭을 보면 일본은 국립공문서관, 중국은 중국국가당안관, 영국은 PRO(Public Record Office), 프랑스는 파리국립기록관, 한국은 정부기록보존소 국립기록관리청이다. 또한 기록의 성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는데, 기록은 생산기관의 활동과 관련 있다는 점, 유기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 공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 등의 고유한 성격을 지닌다. 기록물의 특성은, 그 문헌이 생산되는 특정상황(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증거물이 되며, 사건의 정황 및 시말 등을

시사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지역·시대의 문화 문명을 형성한다는 중요한 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기록물은 보다 개관적인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기억보다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며, 기억의 유지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수집되어, 일정기간 그 목적에 종속된 가치를 지닌다. 기록은 미래의 연구자료로써, 정부기관의 중요기록물은 행정적 가치로써, 개인의 법적 권리, 가족관계, 재산, 상업, 세무관계 등은 법률적 가치로써, 연구보존하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기업과 기록관리 : 한국산업은행 사료관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해 한국산업은행 고창용 부부장이 발표하였다. 고창용 부부장은 한국산업은행은 사료관리 지침에 따라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전시하여 직원의 의식을 고취하고 역사의 기록·연구를 목적으로 사료관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수집대상은 각종 주요문서류, 각종 장표 및 증서류, 인사교육관계물, 사무기기류, 시상·기념품·홍보물류, 사진 및 회화류, 각종 간행물, 기타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이며, 사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료관리자는 조사부장이 하고, 총괄관리자는 사료실 및 사료관리를 위한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료의 보존은 원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편제·편집·제본·표구하여 분실·변질·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하며, 전면 훼손되었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사료, 원본 또는 현물이 수집된 경우 그 중 사료적 가치가 적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사료관리 지침을 설명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⑧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세계는 어떤 문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나” 국제심포지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5월 3일(금)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세계는 어떤 문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나”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화 시대에 사회구조와 국제관계, 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각국이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정책성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적 영향력과 경쟁력을 확대시키며, 국민들의 변화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4가지 주제에 대해 김경동 서울대학교 교수, 베른트 바그너 독일 문화정책협의회 사무차장, 기 사에즈 프랑스 그레노블대 교수, 타니 카즈아키 동경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하였다.

김경동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문화정책 : 현황과 미래 방향”이란 발표문에서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의 근원이 전통에만 국한되거나, 세계적 문화에서만 비롯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전통과 외부 문화의 변증법을 통해서, 즉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세계 문화를 수용하는 정체성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문화 정책이, 1) 조건부 자유방임의 원칙, 2) 문화적 개발에 있어서 지역 자율성의 원칙, 3) 문화 정책에 있어서 인간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른트 바그너 독일 문화정책협의회 사무차장은 “세계화 시대의 독일 문화정책: 도전과 대응”에서 독일의 현 문화정책 개발 및 논쟁에서 주된

이슈는 세계화에 따른, 1) 재정문제, 2) 문화 기관 및 문화정책의 구조, 3) 문화정책의 내용 및 개념에 대한 문제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문화정책의 주권이 주 정부에 있었지만, 2000년에 새롭게 연방정부 차원의 문화·미디어부를 신설하고 6개 부처에 분산되었던 문화행정업무를 통합하였다. 독일 전체의 공공부문 문화비지출은 연간 약 80억 유로(1인당 95유로, 전체예산의 1.29%)에 달하며, 최근 10년 간에 5억 유로가 증가하는 등 문화재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 사에즈 프랑스 그레노블대 교수는 “세계화에 대한 프랑스의 불확실한 입장은 문화적 예외의 종말을 향한 것인가?” 라는 발제에서 세계화라는 동질화·획일화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문화정책 강화와 함께, 모두가 문화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문화산업과 문화기관의 경영기법 도입 등의 조화, 전통적인 중앙정부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로의 전환 등의 정책변화를 소개했다.

타니 카즈아키 동경외국어대 교수는 “문화정책의 르네상스 또는 사회 교육의 위기: 일본 국민관(지역주민회관)의 구조적 전환”이란 발표문에서 전통적으로 예술문화와 사회교육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정책개념을 도입하고 그 범주를 확대한 “문화예술진흥기본법”(2001년 11월에 제정)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하고, 전통적인 사회교육 중심의 일본문화정책의 위기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⑨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관광정책의 방향” 문화정책 토론회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은 5월 16일(목)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문화관광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여가시간 증대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계 전반의 변화양상을 검토하고 문화·관광·체육·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종사자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문화관광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이 맡았는데, 이 연구실장은 문화관광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여가시간 증대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개인생활시간의 배분 변화에 따라 개인의 여유있고 풍요로운 생활로 삶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고,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경제 및 사회적 활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예상 경향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계에서 여가오락에 사용하는 비용의 점차적인 증가, 여가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소비우선순위를 점차 높게 두는 경향이 팽배되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 여가활동 실태에서는 문화예술감상, 문화예술창작이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생활권문화시설이 늘어나고, 문화예술단체가 증가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생활가까이에서 문화생활에 접근’하기 위한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지방문예회관 등의 생활권문화시설은 1998년 701개에서 2001년에 832개로 늘었다.(연평균증가율 6.2%)

이에 따른 새로운 경향이 예상되는데, 시간소비형, 관람형, 프로그램 모방형 여가 형태로 나

갈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창조형, 프로그램 제작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화와 연계시킨 소비 증대, 특히 외식, 건강, 미용, 스포츠, 관광결합, 가족동반, 대중문화 우선적인 여가소비 증대, 문화, 관광, 생활체육, 청소년 대상 등 제 분야의 시설,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양적인 확대 등으로 다변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문화소비의 격차가 발생되어 예컨대, 대도시, 여유층, 정규근로자, 남자, 미혼자들이 대량 참여하고 그 반대층은 상대적 소외감을 가질 것이며, 자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경마, 카지노 등에서의 시간소비 및 사행성 오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가회망자 급증에 따라서 생활권에 인접하는 문화체육시설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문화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특별한 인력보강이 없어 추가근무 시간증가에 따른 업무부담이 예상된다.

대응전략으로는, 여가중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주5일제의 취지, 각 생활단위(가정, 학교, 지역사회, 문화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을 새롭게 계발하고 적절한 역할분담에 유의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은 국민들의 문화적 여가활동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필요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개개인의 적극적인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마련하여 여가시간이 낭비로 흐르지 않고, 지식정보사회의 창조적 문화역량 축적 계기로 활용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기반 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노력, 문화단체의 문화협동 유도, 관련 법규의 보완, 정착 시까지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도서관 관련행사 소개 ⑩ ; 한국문화경제학회와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 '문화와 기업' 심포지엄 개최

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박수일)와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회장 손길승)는 5월 24일 '문화와 기업'이라는 주제로 을지로 삼성화재보험 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메세나)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문화예술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지명관 한림대 교수는 '메세나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강연하였다. 지 교수는 부를 통하여 문화예술에 기여하여 품위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개인이 노동만이 아니라 여가를 즐길 줄 알아야 자신을 지탱할 수 있듯이 사회의 생명도 그래야 지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기업과 문화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하는 시대라고 하였다. 현대적인 유토 피아는 모든 국가나 사회 또는 개인이 자기가 획득한 재화의 몇 퍼센트인가를 사회에 환원시키는 시대이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군가의 강요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문화와 기업에 관한 세 편의 논문도 발표되었다. 김소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기업이미지와 문화예술분야 적합도(fit) 모델을 이용한 기업메세나 지원전략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연구원은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정부기관에서의 지원과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기업의 메세나 지원 전략 결정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가장 적합한 문화예술분야를 결정해야한다며 전략적인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메세나 활동을 하는 기업은 현재의 기업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

후 현재 이미지를 변경하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추구하고자 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 하나 현재 적합도 분석에서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쟁사가 지원하고 있지 않은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문화예술분야(또는 그 이미지)를 선정하는 효과와 함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 메세나 활동의 사회적 공헌을 실현하는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선정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양현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 변화 : 자선에서 문화투자자로"에 대해 발표하였다. 양 연구원은 1 기업 1문화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기업 문화예술 지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업의 참여의지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과 문화예술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문화예술을 포함한 공익부문에 대한 기업의 기부활동은 사회 전반에 대해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갖게 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기업에 주는 첫 번째 혜택의 범주는 기업의 정당성이다. 이는 기업활동의 용이성 증대, 기업이미지 제고, 기업 간 유대관계 증진, 투자유치 가능성 제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는 시장 우위이다. 이는 매출 증대, 브랜드인지도 제고, 고객 유지, 가격 프리미엄 획득이라는 네 가지 혜택으로 나누어진다. 세 번째는 종업원에 대한 혜택이다. 이는 생산성 증대, 신규직원 확보 및 유지, 기술 및 지식 개발, 네트워킹, 조직문화 고양으로 나누어진다. 2001년도의 기업 문화예술 지원은 상위

20개사의 지원금액이 전체의 92.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 상위 20개사의 지원비중이 86.2%였던 것과 비교할 때, 소수 대기업 중심의 지원 추세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분야는 음악분야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미술, 문학, 연극 순으로 나타났다. 대중음악, 뮤지컬 등 대중예술 분야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지원은 기업재단을 통한 지원, 기업 홍보 혹은 마케팅 부서를 통한 지원으로 나뉘어진다. 이제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은 자선적 또는 준조세적 지원에서 기업의 문화자본을 구축하기 위한 문화투자로 이해되어야 하며 문화투자 관점에 입각한 전략적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기업인들에게 기업 문화예술 지원이 기업경영에서 갖는 가치를 인식시켜 그동안 지원경험이 없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국은 'New Partners'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처음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업이 이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이를 심사하여 우수한 지원사업에 대해 기업이 제공하는 지원비와 동일한 1:1 비율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단체 측에서는 지원금을 두 배로 받는 셈이고 기업은 반만 내고도 두 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면 문화적 마인드가 없고 예술에 문외한인 기업, 지원은 하고 싶는데 여유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독려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상오 상지대 교수는 “일본기업메세나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본의 기업

메세나 활동이 본격화된 지난 10여 년 간을 놓고 볼 때, 불황이 심화된 1990년대 전반까지 부분적으로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기업문화를 확립하는 등 기업의 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었다고 하였다. 일본의 기업 메세나는 두 가지 형태를 주를 이루는데, 그 첫 번째는 문화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은 구하면서도 기업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문화사업이나 이벤트를 추진해 가는 방식이며, 또한 협찬으로서 이미 문화단체가 추진해 온 계획서에 입각하여 자금의 일부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업 메세나라는 용어는 예술문화지원에 따른 단기적인 대가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이면서도 간접적인 보상을 구하는 차원이라며 문화정책의 한 주체로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관료적 특성으로 문화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화정책의 한 주체로서의 기업 메세나 활동, 특히 문화행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같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효과를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일본의 기업 메세나 활동은 초기의 개별적인 공연활동이나 전시활동에 대한 지원 활동에서 벗어나서 예술 활동과 사회를 이어주는 차원에서 기업 메세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도 그 시사점이 풍부하다고 제언하였다.